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

연구과제명	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 제도에 관한 연구
연구수행자	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(책임연구원 : 서희석 부산대 교수)
연구자 선정방식	경쟁입찰
연구기간	2017. 2. ~ 2017. 7. (5개월, 부가세 포함 2,500만원)
연구결과	- 주요 대륙법계 국가들의 집단소송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여 비교법적 이해를 높여줌 -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제도는 ① 금전지급의무 중 소비자계약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한정하고, ② 원고적격을 특정적격소비자단체에 한정하며, ③ 2단계형의 절차(공통 쟁점 확인→개별소비자의 권리 확정)를 채용하면서 opt-in형을 가미함 - 연구자는 일본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1단계판결의 기판력이 그 승패에 따라 확장여부가 달라지는 (기판력의 편면적 확장효) 이론적 난점, ② 원고적격을 소비자단체에 한정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이례적인 점, ③ 인신손해나 확대손해, 위자료의 배상청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제계를 과도하게 배려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음 -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는, 우리나라의 단체소송제도의 경우 원고적격이 되는 '단체'의 범위가 비교적 폭넓게 되어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존재한다고 평가하면서 우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사안에 한정한 후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리고 구체적인 소비자집단소송법안까지 마련하여 제시함

평가항목	상	중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○		
내용의 완결성		○	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○		
참고문헌의 충실도	○		
학술적, 실무적 가치	○		
제출기간 준수	○		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○		
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	○		

평과 결과 총평	-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소비자집단 피해는 전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하고, 20대 국회 들어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 관련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므로 특히, 주요국의 다수피해자 관련 소송제도의 경향,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 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에 관한 부분은 입법 대응자료로서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
공개 여부	공개(사본형태로 공개)
과제담당관	소속(직급) : 사법지원실(심의관) 성명: 이준현

※ 작성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법원행정처